## 경기 및 충청지역 폭설피해 심각

지난 1월7일 20년만에 내린 폭설로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 오리사육농가들의 피해가 커 이지역 오리사육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또 이들 피해농가들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무허가축사시설에서 오리를 사육하다 피해를 입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별도의 피해복구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회가 이 지역 회원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폭설로 축사가 완전파손되거나 반파된 농가는 서울경기지역에 35개 농가에 축사파손 면적은 1만8천4백평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피해규모는 18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축폐사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피해농가의 오리 사육수수가 27만수내외로 이중 30%내외인 8만여수의 오리가 폐사된 것으로 추정할 때 피해액은 2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협회원 이외에 피해를 본 농가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는 시설파손에 의한 피해 80억, 가축폐사에 의한 피해 20억등 약 1백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협회원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피해농가중 종오리 사육농가 7개농장이 포함되어 향후 새끼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육용오리 생산에도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 화성지역에서 오리주당 2천수내외를 입식하던 한 농가는 이번 폭설로 축사 10동 중 7동이 완전 무너져 내려 신규 새끼입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축사복구역시 한파로 눈이 얼은데다가 추위까지 겹쳐 복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피해농가는 축사를 임대하여 오리를 사육하였으나 이번 축사파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다른 농가는 무허가 축사시설에서 오리를 사육하다 피해를 입었으나 해당관청으로부터 무허가 시설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규정에 따르면 축사파손의 경우 600㎡ 미만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20%보조에 융자 60%, 자부담 20%이며 600㎡ 이상 파손된 축사는 보조없이 융자 70%에 자부담 30%의 자금을 지원토록하고 있다.

피해액 산출기준은 피해면적에 시설단가, 건축경과년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건축경과년수에 따른 피해산출 기준율은 일반축사의 경우 5년미만은 100%, 10년미만은 85%,15년이하는 75%, 보온덮개형축사는 1년미만 100%, 2년미만 90%등 매년 10%로 감산되어 10년경과되면 10%의 기준율이 적용된다.

축사형태별 ㎡당 지원금액은 육계사의 경우 9만9천원 보온덮개형축사는 3만9천원이다.

또 가축폐사시 가축입식에 따른 자금이 지원되는데 지원금액 기준은 육계병아리 427원, 중추 670원, 산란계병아리 553원, 중추 1,700원이고 오리는 새끼오리 664원이다.

## 오리도축가공시설 설치사업 시행요령 개정

오리도축가공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사업자는 오는 1월 30일까지 해당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1월 9일 2001년 오리도축시설 설치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통보했다.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오리의 생산,도축 가공 및 판매에 이르는 계열화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로서 오리도축장 경영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중인사업자이며 오리도축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시설을 지원하되 기존 노후화된 닭, 또는 유통업자로서 사업자로 선정된 자(소규모 1일 도축능력 1만수미만)이다.

사업기간은 신규사업대상자는 2001년 1년이며 사업내용은 자금의 용도가 오리도축시설, 저장보관시설, 가공시설, 저장보관시설, 가공시설, 오 폐수 시설, 및 오리도축을 위한 기계 장비구입비등이며 2001년 신규사업대상자는 가공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따른 2001년 사업비는 축발기금에서 20억원을 추가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신청은 오는 1월 30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군은 2월 10일까지 시도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2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사업신청지역은 오리도축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인천광역시 등이고 구비서류는 오리도축장 시설 세부사업계획서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부에서 선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잠정선정된 자를 우선 선정검토 토록하고 있다.

자금지원기준은 오리도축시설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한편 2000년부터 2년간 지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오리도축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맥97억7천6백만원에 융자 1백56억5천3백만원, 자담 41억2천3백만원이 사업비로 지원된다.

업체별 사업비는 혜성농산이 총사업비 44억 4백만원에 융자 34억4천3백만원 자부담 9억7천1백만원이며 화인코리아는 총 사업비 1백53억7천2백만원에 융자 1백22억2천만원에 자부담 31억5천2백만원이다.

## 축산물위생교육 등 완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개정령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오던 위생교육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기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지않아도 된다.

또 축산물가공업자가 영업허가 신청시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은 종전 제 48조(교육시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자의 영업자가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하던 것을 이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6시간으로 개정했다.

또 시행규칙 제30조에서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토록한 조항이 삭제됐다.

## 냉장오리고기 개방이래 처음으로 수입

오리고기 수입개방이래 처음으로 냉장 신선 오리고기가 수입되어 향후 오리고기 소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냉장오리고기 7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수입은 같은날 2회에 걸쳐 1건은 74박스에 991kg, 1,386달러어치가 수입되었으며 또다른 1건은 586박스에 5,996kg, 14,915달러어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된 냉장오리고기 수입가격은 전자의 경우 kg당 1.40달러선, 후자의 경우 kg당 2.5달러선에 수입되었으며 kg당 평균 수입가격은 2.33달러선으로 냉동오리고기 수입가격 2달러선에 비해 0.33달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수입가격을 통관비용등 제반경비를 포함한 kg당 가격환산시 전자의 경우는 2,012원, 후자의 경우는 3,353원으로 평균 3,35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냉장오리고기는 국내산 오리고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지난해 9월이후 산지오리가격 폭락으로 가격차이가 5백원선으로 줄어들면서 시장내 반응이 좋지 못하여 이후 수입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오리경기불황 5개월째 지속 사육포기등 총체적 위기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오리업계의 경기불황이 5개월째 지속되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오리사육농가들은 전염성 간염에 의한 새끼오리 폐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불황에 의한 가격하락등 2중고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오리사육업계는 개별사육농가들의 사육비중은 크게 낮아지는데 반해 사육 유통등 계열화 사업체들의 사육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금회전이 안되어 관련업계 모두가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리업계의 이같은 장기불황은 지난5월이후 수입이 재개된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재개에 따른 수입량 증가와 사육량 증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오리고기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생산비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산지 오리가격은 년말년시를 전후해서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각업체별 냉동물량이 풀리지 못하고 있어 가격호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오리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197% 증가

지난해 오리고기 수입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가격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11월까지 수입된 오리고기는 3,706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77톤에 비해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오리고기 수입량은 3천8백톤 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여 99년도 수입량 2,009에 비해 190%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금액상으로는 8백15만3천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 같은기간 5백46만달러에 비해 149% 증가하는데 그쳐 수입가격은 오히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도 kg당 수입가격 2.9달러선에 비해 25%가 하락한 2.2달러선에 수입된 가격이다.

이와같이 지난해 오리고기 수입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은 중국산가금육 수입재개에 따라 수입선이 다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이후 폭증하던 수입량이 3/4분기부터 크게 줄어든 것은 수입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지가격 하락과 중국산오리고기 수입이 중지된 지난 2년간 소비시장의 대부분이 신선육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내 오리고기 소비시장을 수입육에 내주지 않기위해서는 가격경쟁이외에 신선육시장을 지키기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업계종사자들의 다양한 대책마련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오리전염성 간염백신 3월이후 상용화전망

오리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의 하나인 오리전염성 간염에 대한 백신이 빠르면 3월중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녹십자수의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오리전염성 간염백신에 대하여 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국가검정이 이뤄져야 하나 이는 아직 신청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서 녹십자수의 약품관계자는 품목 허가사항을 통보받지 못했으나 품목허가가 통보되면 바로 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상적으로 품목허가 및 국가검정이 완료되기까지 1달이내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빠르면 3월중 사육농가에서 간염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오리위생도압 시행 올 하반기 시행움직임

지난해 9월부터 일기 시작한 오리고기 위생도압 시행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하여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위생고시를 개정하여 올 1월부터 시행토록 계획했으나 오리작업장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시행을 유보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국에 신규 및 닭도계장에 대하여 오리를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 여건을 상반기 중에 갖출 계획이며 작업여건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부터 오리고기에 대한 위생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리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